

최근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 방향 **: 갈등 구조의 특성과 능동적 대응전략 구상**

이 상 우

서강대 명예교수, 전 한림대 총장

남북한 갈등은 민족내부갈등(intranational Conflict)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전이다. 서로 상대방의 주민과 영토를 자기의 정치체제에 수용하는 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러나 분단 기간이 60년이 지나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분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되다보니 점차로 그 갈등 성격이 민족간 갈등(international Conflict)으로 변질되고 있다. 민족을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인간집단’이라고 한다면 공유하는 생활양식이 거의 없어진 상태에서 민족동질성을 기초로 하는 동포 의식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민의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국민의 대북한 인식은 점차로 적대국에 대한 감정과 유사한 국가간 갈등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북한은 남북한 분단이 단순한 생활공간의 분단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계급적으로 분할한 특이한 분단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집요하게 계급투쟁에 초점을 맞춘 정치전에 집착하고 있다. 북한은 분단 과정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회 상층 계층이 모두 남으로 이동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무산 계급만의 사회가 되면서 쉽게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으나 남한사회는 모든 계급이 공존하는 복합 사회여서 남한사회 내의 프롤레타리아계급과 연대하여 남한사회 내에서 계급투쟁을 벌이면 남쪽에서 인민민주

주의혁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남한사회에 친북 사회주의 정부를 세우게 되면 북한의 남반부 해방은 전쟁 없이도 이를 수 있다고 북한의 전략가들은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DMZ가 아닌 서울이 주전장(主戰場)”이라고 선언하고 집요하게 남한사회 내에서 통일전선전략을 펴고 있으나 한국 국민들은 이를 경시하고 있다. 압도적 국력 차이로 더 이상 북한은 대한민국에 도전하지 못하리라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는 북한의 침투전략(subversion strategy)에 취약하다. 국력 우위로 북한체제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한국의 압도전략(overriding strategy)은 표면상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북한의 침투공작으로 내부 질서가 허물어지면 외형상의 승리는 무의미해진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내부 분열로 자멸했다는 점을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북한의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대 국가 차원의 경쟁에서 북한에 대한 압도적 국력 우위를 확보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한국사회 내의 계급투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의 침투공작을 무력화시키는 내부 투쟁에서도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는 정치전에서도 승리하여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특성,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정치전 양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압도전략 방안 등 세 가지 점에 대하여 약술한다.

1. 남북한 관계의 특성

1) 남북한 계급 분단

남북 분단은 물리적 생활공간의 분단만이 아니었다. 공산종주국이던 구소련군의 북한 점령으로 국토가 분단되면서 북한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이 들어섰다.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계급 독재를 제도화 하면서 자산 계층을 ‘계급의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으로 제거해버렸다. 1946년 2월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을 단행하여 자산 계층의 생활 기반을 제거했고 이어서 단행한 모든 생산 수단의 국유화로 자산 계층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붕괴시켰다. 이러한 조치로 지주 계층, 지식인 계층 등 사회 상층 계층은 대부분 남한으로 탈출하였으며 탈출 못한

사람들은 ‘인민의 적’으로 규정되어 처형되었다. 남북한 분단은 단순한 생활 공간의 분단이 아니라 계급 분단의 성격도 가지게 되었다.

북한은 분단 이래 지금까지 철저한 전체주의 전제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사회를 남한을 포함한 외부 세계와 격리시켜 왔다. 북한에는 혁명 주도 세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지배계급’은 형성되었지만 자산계급은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

남한사회는 중산층 이상이 비대한 특이한 사회계층구조를 갖게 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계급 구조로 안정화 되어 왔다. 한국에서도 농지개혁이 이루어져 지주계급은 몰락했으며 이에 대신하여 확대된 교육 기회를 이용한 계급 상승, 자유기업 풍토에서 출현한 신흥 재벌의 출현 등으로 다층 계층 구조가 서서히 자리 잡아 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계급 상승의 기회가 생겨남으로써 계층은 ‘세습된 것’이 아닌 ‘성취된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계급의식은 뚜렷하지 않았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인구의 85%가 스스로를 중산층 이상이라고 분류했었다. 소득 수준은 낮아도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계층 구조는 그러나 지배층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를 굳히면서 점차 계급화 되어 2010년 현재는 ‘세습계급’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남북한 분단이 계층 분단의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대남 정치전의 틀이 마련되었다. 북한은 남쪽 사회에서 체제 불만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계층과의 연대로 반정부, 반체제투쟁을 펼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1964년 2월 27일에 열린 조선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남조선해방전략’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계획이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북한은 남한 내에서의 계급투쟁을 지도하기 위해서 ‘통일혁명당’이라는 지하 조직을 구축하고 노동당 내에는 ‘조국평화통일전선’ 등 여러 조직을 만들었다. 또한 남한사회 내에 각종 위장 친북 NGO 등 표면상 북한과 관련이 없는 여러 조직을 만들어 통일전선전략을 전개해왔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조직, 정치조직, 사회조직 내에도 위장침투하여 혁명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 주민 전부와 한국 내의 친북세력을 합치면 전민족 사회 성원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방된 체제를 이용하면 한국 내에서 선거를 통한 친북정권 창출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2) 민족간 갈등으로의 진화

민족은 문화 동질성을 공유한 인간집단이다. 문화는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살면서 공유하게 된 생활양식의 총화라 할 수 있다.

분단 당시는 한반도 거주 한민족공동체 성원은 모두 같은 문화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었고 모두 그러한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폐쇄 속에서 독자적 문화를 만들어 오면서 남북한 주민간의 민족동질성은 약화되어 왔다. 북한 지역에 가 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과 접촉해 본 적도 없는 대부분의 한국민에게 북한 주민은 학습을 통하여 동포라고 배워 온 동족일 뿐이다. 더구나 북한 정권은 특이한 문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왔다. 언어도 한국 표준어를 버리고 ‘문화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 쓰고 있으며 가치관도 조직적으로 주입하여 와서 북한 주민들은 이제 한국민들에게는 ‘외형은 같으나 생각이 전혀 다른 동포’로 되었다. 최근 탈북한 동포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질성이 이를 보여준다.

북한은 북한 주민 스스로를 ‘김일성 민족’이라고 선언했다. 즉 정형화시킨 북한 문화에 친숙한 사람만을 독자적 민족으로 새로 분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이 지속되면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차원에서의 일체성은 약화되고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민족 내부의 집단간의 관계가 아닌 ‘민족간의 관계’로 진화하게 된다.

단일정치체제 속에서 오래 생활하면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의 민족으로 오래 같이 살게 되면 스스로의 정치체제를 가지고 싶어 한다. 남북한 주민은 이미 65년간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 왔다. 이에 따라 단일민족 의식도 점차 희박해져 왔다. “민족은 하나”라는 정치적 구호와는 별개로 이것은 현실이다. 최근(2009)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의 한국 주민이 북한과의 통일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제사회가 남북한을 모두 자주독립국가로 승인한 것도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남북한 정부는 서로 상대방에게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국제법을 준수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주권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서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

남북한 갈등은 아직 민족 내부적 갈등이라는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점차로 국가간 갈등, 민족간 갈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2. 북한의 정치전 중심 대남전략

1960년대에 완성된 북한의 ‘남조선해방전략’은 2010년인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 점령에서 남반부를 해방한다’는 ‘민족해방(National Liberation : NL)’과 남한사회 내에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을 해방한다는 ‘인민민주혁명(People's Democratic Revolution : PDR)’ 두 가지 전략 목표를 세우고 모든 노력을 이에 맞추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고 남한사회에서 다양한 반체제 세력과의 통일전선(united front)을 구축하여 혁명을 완성한 후 친북정권을 창출하여 통일을 이룬다는 구상도 40년 전 그대로다.

북한의 대남전략을 틀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수단은 남한사회 내에 친북조직원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 ‘사회정의실현’ 등의 가치를 내세우고 반체제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레닌(V.I. Lenin)의 공산혁명 전략의 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레닌전략의 모체가 된 손자(孫子)는 자기를 지키고 상대방에 침투하여 내부에서 붕괴시키면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남쪽보다 열세인 국력을 감안하여 이러한 침투-내부붕괴 유도라는 정치전을 주공(主攻)으로, 그리고 군사력을 보조적 지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전의 핵심은 기만과 위장이다. 대중이 가장 존경하는 성직자의 신분을 얻어 반체제운동을 종교 활동으로 위장한다든가, 민주화라는 모든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구호 아래 반체제운동을 펼치는 것 등이 그 수단이다. 1987년에 완성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기만과 위장의 정치투쟁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정치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무력도발을 정치전이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한국 국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하여 이들이 “평화를 위하여 북한을 포용하라”고 정부에 압박을 하도록 만들려 하고 있다. 대중영합주의에 경도된 정치인, 정당들은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대변해 줄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제재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북한은 기대하고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북한이 한국 내에 심어 놓은 친북조직의 위력을 실험해보기 위하여 행한 실험적 도발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35년 전 내가 한 국제회의에서 남북한의 통일전략을 비교하기 위해서 발표했던 논문, “Overriding Strategy versus Subversion Tactics : A Macro-Comparative

Study on South and North Korean Unification Strategies”(1976, 멕시코, 제30차 아시아-북아프리카 인문과학 총회) 내용은 지금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때 예측했던 것보다 북한의 대남전략이 좀 더 세련되었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노동당 내에 통일전선부를 두고 그 산하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한국민족민주주의전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등 기구를 설치하고 이들 기구의 일부를 한국 내에서 합법화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은 그동안 상당 수준 정치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3. 이기는 전략과 전력

북한 정권과의 싸움에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겨야 한다. 5천만 한국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시대착오적 공산전체주의 전제정치 확산을 막아야 한다. 북한 주민 2천4백만 동포도 우리처럼 “인권이 보장된 자유”와 “삶을 즐길 수 있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겨야 한다.

정치전은 전쟁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손자 이래의 기초 상식이다.

분단 초기에는 구소련의 전폭적 지원을 받던 북한의 군사력과 공업 생산력이 남한을 압도하였다. 한국은 방어적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군사적으로는 동맹국 미국의 해공군 전력 지원을 받아 북의 도발을 격퇴한다는 ‘거부능력에 기초한 방어(defense by denial)’ 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국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했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소극적 방어 전략과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 이 전략은 성공하면 현상유지이고 실패하면 지는 아주 소극적 전략이다. 그리고 항상 북한에게 한반도 안정유지의 주도권을 맡겨 놓게 된다.

정치전에서는 더 소극적 전략을 유지해 왔었다. 북한체제를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고쳐 나가는 전략보다는 우리 사회에 침투한 북한 공작원과의 투쟁이라는 철저한 수동적, 방어 전략만 유지해 왔었다. 정치전은 정치-사회 전영역에서 전개되는 싸움인데도 오직 공안 기관에만 그 전쟁을 맡겨 두어 왔다. 그 결과로 경제 역량에서 북한을 압도하게 된 후에도 북한의 정치전 공세에 밀려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못하고 있다.

번영하는 한국, 민주적 한국, 자주적인 강한 한국, 그리고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 통일한국을 만들겠다는 Global Korea의 장기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인의 안전과 한반도의 안정을 우리가 주도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적 전략과 정치전 전략을 적극적, 공세적인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 직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충분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능동적 억제전략(proactive deterrence strategy)’을 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충분한 독자적 해공전력을 갖추어 자주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전력을 갖추면 북한 정권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수 있고 남북한 군사관계를 우리 주도로 안정화할 수 있다.

정치전은 더 어렵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 사는 나라로 오직 이념과 체제만 달라 서로 투쟁하는 사이다. 이념은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한 다양할 수밖에 없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20 내지 30% 정도의 국민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선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풍토에서는 북한의 정치전 공세에 호응할 수 있는 국민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정치전의 1차적 목표는 한국사회의 계층 구조를 계급화 되지 않게 만드는 데 두어야 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이 계층을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언제든지 넘어설 수 있도록 신분 상승의 통로와 수단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신분 상승의 길이 열려 있는 한 자유시민들은 반체제적이 되지 않는다. 교육 기회를 이용하여, 그리고 자유기업을 통하여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한 자유시민들은 공산주의 정치선전에 현혹되지 않는다.

정치전에서도 점차로 북한체제를 정상화, 민주화, 개방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 관계의 안정을 위하여 북한 정권과의 공존을 유지하면서 북한 정권 스스로가 개혁개방을 추진해 나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

분단 65년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소극적 노력에 매달려 왔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

모든 전쟁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한다. 재정적 부담, 군복무 등 시간과 노력의 부담 등을 흔쾌히 수락할 수 있는 성숙된 시민들만이 정치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평화는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상태이지 남이 만들어주는 상태가 아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반도 정세 진단과 발전 방향

<토론 주제>

1. 정세 진단

- 1) 천안함사건
북한의 의도는? 독립된 사건인가? 대남전략의 부분인가?
- 2) 예상되는 북한 도발
G-20 이전에 어떤 도발이 있을 것인가?
- 3) 미-중 관계
미중의 영향력 경쟁 - 어디까지 갈 것인가?
- 4) 6자회담
회담 재개 가능성은? 핵제거에 도움 될까?
- 5) 한미동맹
한국의 기대와 미국의 기대간의 조화 가능한가?

2. 남북한 관계의 구조적 특성

- 1) 남북한 갈등의 특이성
남북한 갈등은 민족내부갈등인가? 국가간 갈등인가?
- 2) 북한의 대남 정치전
북한의 대남 정치전 - 성공할까?
- 3) 북한 정권의 장래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은?

3. 한국의 대응전략

- 1) Global Korea의 비전과 통일 목표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원칙은?
- 2) 군사적 대응
앞으로도 도발을 허용할 것인가?
‘거부 중심 방어’에서 ‘능동적 억제’로 전략 지침을 전환한다면?
- 3) 정치적 대응
남남갈등의 해소 방안은? 북한 정치적 방치해도 좋은가?
- 4) 국제협력
한미-한중 관계의 조화 가능한가?